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3**

북한의 대남전략



유동업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CONTENTS

제 1 장 북한 대남전략의 이론적 배경

1.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개념 - 6
2. 공산주의 혁명전략 유형 - 8

제 2 장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1. 북한 대남전략의 개념과 운용원리 - 12
2. 북한 대남전략의 기초 - 14
3. 북한 대남전략 노선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 18
4.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 25

제 3 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방안

1.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방안의 관계 - 40
2. 북한의 통일노선과 비판 - 41

제 4 장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양상

1.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 - 58
2.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 68
3. 북한의 대남전략 기구 - 73

제 5 장 북한 대남전략 전망

1.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 - 86
2. 향후 대남전략 전망 - 88

참고문헌



북한 대남전략의 이론적 배경

1.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개념
2. 공산주의 혁명전략 유형

제 1장 북한 대남전략의 이론적 배경

1.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개념

북한의 대남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전술이란 용어는 주로 전쟁과 관련한 군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전략전술은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된 정치적 개념임을 밝혀둔다.

전략전술이란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공산당 세력의 제반 책략체계를 가리키는 실천적인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간략히 말하면 공산당 세력의 행동법칙인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전략전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산주의 사상체계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공산당 세력의 행동방식과 향후 활동양

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전략전술은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다. 전략전술 개념의 태동은 공산주의를 창시한 맑스(K.Marx)와 엥겔스(F.Engds)에 의해서이며, 레닌(V.I.Lenin)에 의해 전략전술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고 스탈린 시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스탈린(J.V.Stalin)은 『레닌주의의 기초』(1924)라는 공산혁명지침서에서 “전략전술이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계급투쟁을 지도하는 과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략이란 “혁명의 해당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주요 공격방향을 결정하고, 혁명역량을 적절히 배치하여 혁명단계 전 기간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해나가는 투쟁”이라고 정의한다. 즉 전략은 혁명단계에서 ①타도할 대상(主敵)을 결정하고 ②혁명동력(주력군과 예비군)을 편성하여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기본적인 투쟁지침이다.

반면 전술이란 “혁명운동의 간조와 만조, 혁명의 양양과 침체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행동노선 즉 투쟁형태, 조직형태, 표어(선동 슬로건)배합 등을 결정하여 이를 실천해나가는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전술은 혁명과정에서 주어진 상황변화에 따라 공산혁명의 주력세력의 행동노선(조직노선, 투쟁노선, 표어노선)을 결정하여 투쟁하는 세부적인 투쟁지침이다.

따라서 전략은 혁명이 성사될 때까지 거시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목표달성 시 까지 불변) 반면, 전술은 미시적이며 단기간의 행동노선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된다.

〈도표1〉 전략과 전술비교

구 분	전 략(strategy)	전 술(tactics)
기본 정의	혁명의 기본계획 및 실천지침	혁명의 세부계획 및 실천지침
기간/범위	장기적, 거시적	단기적, 미시적
변화유무	불 변(不變)	변화무쌍
주요 내용	타도대상과 혁명역량 (주력군, 예비군) 편성	주력군의 행동양식 결정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구호 배합)

2. 공산주의 혁명전략 유형

공산주의 혁명의 전략유형은 1928년 개최된 코민테른(Comintern, 제3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에서 제시되었다. 레닌의 지시에 의해 레닌의 공산혁명전략을 원용하고 있는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의 세계독재를 위한 투쟁과 혁명의 유형’이라고 명명하고, 각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따라 공산혁명 전략유형을 크게 ①선진국형 : 사회주의 혁명전략 ②중진국형 :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전략 ③후진국형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전략(1944년경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으로 명명)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외 1960년 12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81개국 공산당 및 노동자당 대표자회의’에서 부족국가용 혁명전략으로 ‘최후진국형 : 민족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사회주의 혁명전략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

서의 혁명전략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충분히 성장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직투론(사회주의 직접이행론)으로 1단계 혁명전략에 속한다. 그러나 이 유형에 의한 혁명은 아직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둘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전략은 자본주의 발전수준이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중진국에서의 혁명전략으로, 일단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전략이다. 이른바 연속 2단계 혁명전략이다. 즉 1단계 예비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본격적인 목적혁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구 소련혁명(러시아혁명)을 들 수 있다.

셋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전략은 식민지, 반(半)식민지 및 종속국 등 후진국에서의 혁명전략이다. 이 전략은 먼저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난 다음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한 소련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폴란드, 체코 등 구 동유럽의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방식에 의한 혁명을 성사시킨 바 있다.

넷째, 민족민주주의 혁명전략은 자본주의 도입과 발전이 매우 저급하고 외세에 종속되어 있으며 아직도 부족국가(部族國家)형태에 머물고 있는 최후진국에서의 혁명전략이다. 이 전략은 우선 민족국가를 형성한 다음 전 부족을 동원하여 민족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반외세 항쟁을 성사시켜 반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로 이행시키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이미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한 소련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2장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1. 북한 대남전략의 개념과 운용원리
2. 북한 대남전략의 기초
3. 북한 대남전략 노선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4.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제2장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1. 북한 대남전략의 개념과 운용원리

(1) 북한 대남전략의 개념

북한 대남전략(對南戰略)이란 ‘대남 혁명전략’ 또는 ‘남조선 혁명전략’의 약칭이며,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대남사업’이라고 통칭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의해보면, 북한의 목표인 ‘전 한반도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실현’(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남한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이라고 하면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대남테러, 납치행위 및 무력도발 등만을 떠올리나, 실제로는 이외에도 남북

대화, 남북교류,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에서의 공작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남전략의 영역이다.

(2) 북한 대남전략의 운용원리 :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 전략을 공산주의 철학관이자 역사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 방식에 의해 전략전술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도 대남전략을 전개할 때 북한관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사관(主體史觀)을 행동원리로 삼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 실제 북한의 대남전략 체계를 보면 주체사상의 원리를 수없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 혁명노선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추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선군노선을 ‘제2의 조선혁명노선’이라 표현하며 김정일 통치시대의 상징조작의 일환으로 선전·선동해오고 있다. 특히 선군노선에 대한 표현도 선군, 선군사상, 선군혁명사상,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 선군혁명 령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선군노선을 초기의 상징조작이나 구호차원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체제 전반에 김정일의 선군노선을 정식화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선군노선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 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

¹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1~3면

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명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북한은 선군노선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며 선군노선을 ‘21세기 주체사상’이라고 밝히고 있다.³ 이는 선군혁명 노선이 북한 대남전략의 운용원리인 주체사상과 동격임을 밝힌 것이다.

북한이 2009년 4월 5일 개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여,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혁명노선 즉 선군사상을 북한당국의 활동노선으로 정식화하고 있는 점도 북한이 선군혁명노선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북한 대남전략의 기초

(1) 북한 대남전략의 정립과정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른바 대남전략을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한 ‘무력해방노선’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1950년 6.25 남침전쟁에 실패한 후 1955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조선혁명을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어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시 이를 공식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제(反帝)란 남조선혁명이 미 제국주의에 반대

² 노동신문 2003. 3.21일자 사설

³ 노동신문 2001.12.15 일자 정론

하는 혁명임을, 반봉건(反封建)이란 미제의 앞잡이인 남한정권과 지주 등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임을 의미한다. 또한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시에는 “남조선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혀, 종전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혼용해왔다.

그 후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는 김일성 교시를 통해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 채택하여 당 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하였다. 북한은 5차 당 대회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해오고 있다.

(2) 북한 대남전략의 기초 :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 대남전략의 기초는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전 조선혁명 달성을 위한 ‘3대 혁명 역량강화 노선’ 즉 ①북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②남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③국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노선이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첫째, 북한 사회주의혁명 역량은 ①정치적 역량 ②경제적 역량 ③군사적 역량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선 북한 인민들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노동계급화하며,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과 혁명건설의 무기인 프

⁴ 허종호, 앞의 책, 271-284면

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정치역량의 강화 유무에 혁명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공고히 하고, 3대 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자원과 기술, 노동 등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군사적 역량강화를 위해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라 4대 군사노선 즉 전 인민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철저히 관철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군사력은 혁명적 무장력으로 반(反)혁명세력을 분쇄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남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란 ①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③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④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용공세력, 반정부세력 등 이른바 친북좌파운동권의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그간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친북좌파 운동권과 연계를 가지고 투쟁자금 지원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연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공작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 학원계와 노동계 등에 '주체사상 선전소조'나 '주시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이 형성되어 대중 의식화에 진력해 온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이란 조직화 공작 차원으로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 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 1990년대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당인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 2000년대 일심회 간첩단 결성에 주력해왔고,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결성에 매진해왔다.

끝으로 반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의 무장력인 국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지는 공작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부 내 간첩을 침투시켜 장교 등을 포섭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부분을 취약하게 유도하여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남한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대공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쇄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국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란 ①사회주의국가 및 제3세계국가의 인민들과 유대강화 ②자본주의국가 내 좌파 노동운동세력과 단결 ③전 세계 반제평화 애호세력(국제공산세력) 지원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북한은 국제혁명 역량강화를 상당부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사회주의 복권운동, 제3세계의 좌파활동, 국제테러단체 지원 및 국제적색노조와

연대활동 등을 통해 국제역량 강화를 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등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북한 내부 혁명역량과 국제 혁명역량의 강화를 피하기는 한계가 있는 바,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노선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 혁명역량 강화노선이다. 그 이유는 북한내부 혁명역량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국제 혁명역량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은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레닌의 전략전술 원리 즉 공산주의 원리를 원용하여 김일성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독창적인 혁명전략이 아니라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 시 채택된 ‘코민테른 강령’ 제4장 8절의 “프롤레타리아의 세계독재를 위한 투쟁과 혁명의 유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공산혁명 전략유형(선진국형, 중진국형, 후진국형)중 식민지, 반식민지 및 종속국에 적용되는 후진국형 공산혁명전략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1) 대남전략의 목표와 성격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와 성격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전 조선혁명 과정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보듯이,

1단계(당면목표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와 2단계(최종 목표 : 남북합작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단계)로 구분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조선노동당규약 전문 중)

여기에서 1단계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통상 ‘남조선혁명전략’이라 칭한다. 북한은 1단계 예비혁명을 완수한 다음, 2단계로 목적혁명인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전략을 전개하는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최근 전문이 공개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2009년 4월 5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시 헌법 수정, 보충)에 의하면, 이전 헌법(1998년 수정)에 명시되어 있던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한바 있다.

이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공산주의 실현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인간해방-노동해방-계급해방의 가치를 내세우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무계급사회의 실현(국가소멸)”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의 이상(理想)은 허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기만체제인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뿐만 아니라, 주체사상 총서와 선군혁명노선 관련 각종 문헌, 노동신문 논설 등에서 공산주의 실현 가치를 명백히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체계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북한의 남한사회에 대한 성격평가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남한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로, 남한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또는 친미파쇼정권) 등으로 성격 지우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남한혁명을 위해선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며 독재정권인 남한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미제축출(미군 철수)-자주화'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현 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킨다.

원래 전략이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단계에서 주요 공격 방향(타도대상)과 혁명동력(주력군과 보조역량)을 배치하여 이를 실천하는 계획인데,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⁵⁾

① 남한사회 평가

5)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론", 『경찰수사보안연구소 보안특별과정교재』, 2005,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북한연구소, 1975, 『북한총람 1982-1992』의 대남전략편 등을 참고

북한은 남한사회를 그동안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 규정해 왔는데,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며 혼용해오다 1980년 이후부터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해오고 있다. 이는 남한사회가 정치체제 면에서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사회이며 사회경제구조는 지주, 소작제도 등 봉건적 잔재와 자본의 전근대성, 매판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반(半)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② 남한사회 모순관

북한은 남한사회가 미제와 남한 인민사이의 '민족모순'과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지주·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피착취 근로인민 사이의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남한사회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및 민족자본가들 사이의 모순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주요 모순은 '미제와 남조선 인민' 사이의 모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③ 혁명대상

이는 남조선혁명에서 타도되어야 할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은 남한혁명의 1차 타도대상(주적)으로 '미제'를, 2차 타도대상으로는 미제와 결탁한 파쇼(한국정권), 지주, 예속자본가(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은 '선미제축출 후 파쇼타도'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④ 혁명역량 편성

이는 남한혁명의 동력(動力)을 편성하는 것으로 주력군과 보조

역량을 배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종래 남한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와 농민, 보조역량으로 진보적인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 소자산 계층, 애국적 군인, 민족자본가 및 각계 각층 인민만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1985년 7월 27일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현 반제민전) 출범과 때를 맞추어 그동안 보조역량의 제1순위였던 ‘진보적인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어 1993년 8월 이후부터 보조역량의 제1순위인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 대열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1993년 8월 20일자에 이어 1993년 10월 31일자의 운동강좌 《변혁운동의 역량편성에 대해》라는 논설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며 이것이 김정일의 방침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진보적 지식인’을 남한혁명의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것은 1990년대 들어 북한이 노동신문, 평양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의 논설을 통해 부쩍 인텔리 계층에 대한 사상개조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인텔리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1980년대 한국사회 변혁을 주도해왔던 청년학생들이 1990년대에는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인텔리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남한혁명의 주력부대로 전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도표2> 북한의 대남혁명역량 편성

주력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및 전위당(반제민전)
보조역량	도시 소자산계급, 애국적 군인,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반제 애국인, 반제종교인, 동요하는 인텔리 및 각계각층 인민

⑤ 혁명의 전략적 단계

북한은 혁명투쟁의 전략적 단계를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중점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혁명의 준비기에는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정권탈취가 기본과업이므로 준비된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⑥ 혁명경로

북한의 남조선혁명 과정을 도식화시켜 보면 ‘미제축출(미군철수) - 파쇼(현정권)타도 - 민족자주정권(인민정권) 수립 - 남북합작(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 - 사회주의국가 건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의 남북합작에 대해 북한은 ‘통일의 두 가지 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평화적 전도란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비평화적 전도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 ①남조선 당국이 인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여 실현하는 경우 ②남조선에 반제 자주정권이 수립되거나 중립화되는 경우 ③남조선혁명이 승리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비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 ①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는 경우 ②미제의 침략세력이 약화되었을 경우 ③남조선혁명이 일어나 북한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6) 허종호, 앞의 책, 264-271면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북한이 평화적 전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은 모두 남한 내부혁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코 평화적 방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아래의 인용문은 북한이 평화적 및 비평화적 전도에 관계없이 혁명투쟁(폭력혁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국통일의 전도에는 평화적 및 비평화적 방도가 있다. 그러나 어느 방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이 수행되든지 간에 그것은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이며 혁명과 반혁명,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매족 세력과의 날카로운 힘의 대결이며 예측과 자주성간의 심각한 투쟁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평화적 및 비평화적 수행방도에 관계없이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할 수 있으며 분열과 예측을 노리는 내외의 반혁명세력을 타승하고 국토통일과 민족자주성을 옹호할 수 있다”⁷⁾

⑦ 대남투쟁 3대과제 (자주, 민주,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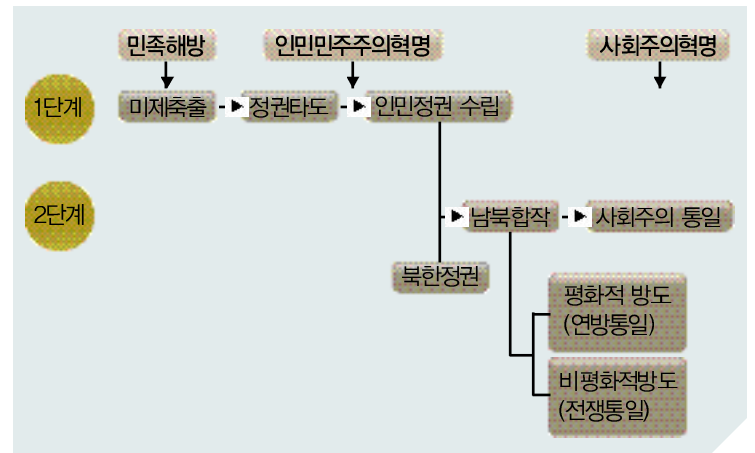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래 남한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 투쟁과제로 ‘자주, 민주, 통일’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방향과 지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1985년 7월27일 반제민전(구 한민전)의 3대 투쟁강령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의 자주란 한국사회가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사회이므로, 남조선혁명을 위해선 먼저 미제를 축출하고 민족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반미 자주화투쟁을 의미한다. 민주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독재파쇼체제이므로 남한 인민이 현 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 정권

⁷⁾ 하중호, 앞의 책, 272-273면

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의미한다. 통일이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른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언뜻 보기에는 ‘자주, 민주, 통일’은 아주 평이한 용어같이 보이나 실은 반미 자주화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이라는 대남투쟁 3대 당면 목표를 지칭하는 북한의 적화혁명 용어인 것이다.

〈도표3〉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과정



4.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은 대남전략의 하위체계로 대남 혁명과정에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는 것이다. 즉 남조선 혁명단계에 있어서 전개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혁명 주력군(노동자, 농민, 청

년학생, 진보적 인텔리 및 전위당)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 슬로건의 배합'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전술은 그 특성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데, 하나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의 변화가 일어난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대표적인 전술을 형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4〉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조직형태	1) 지하당구축 전술 2) 통일전선 전술 3) 프락치(Francia)전술
투쟁형태	1) 합법, 비합법, 반(半)합법 투쟁 전술 2) 경제투쟁, 정치투쟁 전술 3) 폭력, 비폭력투쟁 4) 테러전술, 게릴라전술, 무장봉기 전술, 인민전쟁 전술 5) 대화(협상)전술, 평화공존 전술, 선거투쟁 전술 6) 국군외해전투(戰鬪) 전술 7) 기타
표어형태	1) 선동 슬로건의 배합 전술 2) 폭로전술 3) 기타

(1) 지하당구축 전술

북한 김일성은 일찍이 남한혁명 수행을 위해선 혁명의 참모부인 '전위당' (공산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레닌의 당 조직론에 입각한 것으로 한나라의 공산혁명을 위해선 '소수정

예의 직업혁명가'로 구성되는 전위당 건설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혁명과업이라는데 기인한다.

북한이 지하당 구축전술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첫째, 남한혁명을 추진하는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거점인 동시에 결정적 시기에 혁명을 지도할 혁명의 참모부라는 것이며, 둘째, 남한혁명을 남한 자체의 혁명으로 위장하기 위함이다. 결국 남한혁명을 위해서 남한 인민 스스로 독자적인 당을 결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허구적인 주장이며 그간 북한의 지령에 의해 지하당을 구축해 왔고 기 결성된 지하당들은 모두 대남공작을 위해 북한공작을 수행하는 연락당 정도의 위상을 지니는데 불과 했다. 이것은 모두 남한혁명을 자체혁명으로 위장하려는 술수이다.

북한은 지하당 조직원칙에 있어 레닌의 당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1보전진 2보후퇴'를 원칙으로 삼지만, 다만 남한 내에서 공산당이 불법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①당 건설과 활동을 철저히 비합법적으로 전개할 것 ②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들로 당을 조직할 것 ③혁명의 주력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릴 것 ④당 기반 확대를 위해 대중 조직사업인 인전대(人前隊: 당과 대중을 연결해주는 혁명적 대중단체)를 결성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 내에 지하당(공산당 활동이 불법화된 상황 하에서 비합법 전위당을 지하당으로 호칭)을 결성하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필사적인 대남공작을 전개한 끝에, 1960년대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 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위장조직, 현 반제민전),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민족민주혁명당 등을 남한에 구축한 바 있다.

(2) 통일전선전술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동맹전술이다. 특히 통일전선전술은 북한이 이른바 남조선혁명에서 ‘지하당 구축 전술’과 함께 가장 중시하는 전술이다. 김일성은 남한혁명에서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술차원인 통일전선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개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북한 통일전선 전술의 체계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통일전선의 연혁

통일전선의 효시는 맑스, 엥겔스의 ‘계급동맹론’에서 연원되는데 사회주의혁명의 전단계인 부르주아혁명을 하는데 있어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농민, 도시 소자산층과의 연합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러시아혁명 시 레닌의 ‘노농동맹론’에서 이를 발전시켰다. 레닌은 러시아혁명 시 노동자계급(당시 10%미만)을 주력군으로 하여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견인하여 동맹대상으로 삼았다. 레닌은 이러한 동맹전술을 발전시켜 『공산주의 좌익소아병』(1920)이라는 책자에서, “정면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정세 하에서는 상대방의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고 동맹 가능한 부동층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비록 불확실하고 조건적 세력일지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라”라고 공산당 동맹전술을 밝히고 있다.⁸⁾

이어 제3차 코민테른대회(1921)에서 ‘통일전선에 관한 과제’가 채택되어 처음 통일전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개념은 노동자계급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주적을 포위, 고립화시키

는 동맹수법으로 통일전선 운동을 운용하였다. 현재적 의미의 통일전선 개념이 구체화된 것은 제7차 코민테른대회(1935)에서 채택한 이른바 ‘디미트로프(Dimitrov)테제’이다. 이는 히틀러의 나찌즘, 뭇솔리니의 파시즘 및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한 비공산세력의 광범위한 결집을 강조한 ‘반파쇼 인민전선’ 결성전술로, 이 개념이 오늘날의 통일전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② 통일전선의 개념

통일전선이란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주적(主敵)을 타도하는데 공산당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을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그 혁명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이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은 정치적 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즉 주적(공동원수) 타도를 위한 노동계급당(공산당)과 제 정치세력의 정치적 연합으로 보고 있다.

통일전선에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아무 때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주적 타도가 어려울 때 비(非)공산세력과 제휴하여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며 둘째, 주적타도라는 목표달성 후에는 제휴했던 비공산세력들을 하나 둘씩 고립화하여 제거시킨다는 점이다.

③ 북한 통일전선의 성격과 위상

8) 김영학, “공산주의전략과 전술”, 『공인연구 제4집』, 공인문제연구소, 1989, 12면

9) 하종호, 앞의 책, 102면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 책임일꾼과의 담화에서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라는 연설을 하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 수립을 위해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 대열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을 주적(공동원수) 타도를 위한 노동계급당(공산당)과 제 정치세력의 정치적 연합으로 보고 있는데, 통일전선은 바로 혁명역량 편성 중 보조역량 편성문제의 성격을 가진다. 즉 통일전선 운동을 통해 남한혁명의 동력인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강화하지는 것이다. 이는 통일전선이 보조역량의 편성문제이지만 결국 혁명의 주력군을 보호 강화하며 동조세력 견인에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남한혁명에서 전술적 차원인 통일전선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지시하며 통일전선을 전략전술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¹⁰ 북한이 통일전선을 전략적 문제로 강변하고 있는 저의는 일단 주적 타도라는 목적달성 후 그간 제휴 연합했던 모든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통일전선의 간교함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전선을 전략 운운하며 제휴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북한 통일전선의 기본강령과 형성원칙

북한은 남한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기본요구를 반영한 최저강령¹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

¹⁰ 허중호, 앞의 책 102면

일전선의 기본강령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의 자주란 남한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외세인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자는 내용이며, 민주란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파쇼정권인 현정권을 타도하고 이른바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며, 통일이란 전민족의 통일을 위해 북한식으로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전선 형성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조직상 원칙으로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군중노선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계급노선 견지란 전위당 영도 하에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며, 군중노선이란 혁명의 보조역량인 도시 소자산계급, 하층근인, 애국적 민족자본가 및 각계각층의 민중과 연합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첫째, 하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 둘째,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셋째, 통일전선체 내에서 중간층, 민족 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또한 투쟁할 것 등이다.¹²

⑤ 북한 통일전선의 특징

북한 통일전선의 특징은 첫째,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을 위해 민족대단결을 통한 '전 민족적

¹¹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조직의 정치강령은 최저강령과 최고강령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최저강령은 예비혁명(1단계혁명)시 광범위한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내세운 아주 기본적인 정치노선을 의미하며, 최고강령은 주로 2단계 혁명(목적혁명)시 사회주의 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노선을 의미한다.

¹² 허중호, 앞의 책, 102-113면

통일전선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산세력 외에 심지어 북한노선을 비판하는 민족주의세력이라 할지라도, 자본가나 지주 또한 부르주아세력인 제1야당까지도 통일전선의 최저강령인 ‘미제축출과 현정권 타도, 조국통일’에만 동의한다면 모조리 규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미국, 현 정권, 매관자본가 및 반동관료 등 타도대상만을 제외하고는 현 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세력을 연합시켜 그들의 역량을 이용하여 주적을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혁명성사후 공산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력은 고립화시켜 제거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북한은 대남통일전선에서 ‘민족’이란 용어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민족대단결, 대민족회의, 민족자주, 민족우선, 조선민족제일주의, 대민족회의, 범민족대회 등의 용어는 바로 통일전선을 상징하는 구호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동일한 지역, 언어, 생활양식, 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민족이라 하면 남북한 전체주민(해외동포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칭하는 민족이란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적 개념인 대남적화혁명의 용어임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대남사업에서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이란 이름 하에 남한 내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남한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은 남한 혁명전선을 ‘민족대 반민족세력’ 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친북좌익 세력들만을 전략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정하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각계 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하여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유민주 수호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셋째, 북한이 타도대상으로 꼽고 있는 재벌(매관자본가로 매도)

이나 고위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연이어 방북초청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상층 통일전선사업을 하는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경제협력 운운하지만 실은 이들 인사에게 반북 적대의식을 버리게 하고 친북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고차원적인 영향공작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층 통일전선은 이들 인사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추종자들을 일거에 통일전선체의 영향 하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넷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상층·중층·하층 통일전선공작의 배합이 정교화되고 강화한 바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반북 적대의식의 희석화와 친북 의식화를 꾀하는 ‘영향공작’을 교묘히 구사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이 ‘국제화’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고립화시키려는 폭넓은 친북통일전선 구축공작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해서 남북한 및 친

¹³ 실제로 북한은 남한혁명전략중 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는 현 정권, 반동관료, 매관자본가, 지주 등을 반민족분자들로 분류하고 이들만 타도하지만(나머지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대단결이란 기치 하에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 2단계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외에는 모두 개조대상 및 고립화대상으로 타도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혁명이 완성되면 남한국민의 60-70%는 반민족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대단결’ 하에 통일이 된다면, 결국 남한내 좌익세력 및 노동자계급 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민족분자로 개조대상이거나 타도대상으로 분류되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 반한성향의 해외동포를 규합하여 대대적인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주관하는 상설적인 조직인 범민련, 범청학련과 같은 친북 통일전선체를 국내외에 결성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 조야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친북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공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1994년 북한의 핵문제에 국제사회가 경제제재, 핵시설 폭파 등 강경노선으로 치달자, 북한은 미국 내 진보적 인사 및 언론을 상대로 상층 통일전선 공작을 집요하게 전개하였다.

(3) 대중투쟁 전술

김일성은 남한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종 대중투쟁의 유형과 방법을 잘 배합한다고 강조하고, 이른바 대중투쟁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첫째, 합법, 비합법, 반합법 투쟁의 배합전술이다. 북한은 남한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합법, 비합법, 반합법 투쟁의 적절한 배합을 강조하고 있다. 합법(合法)투쟁이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비(非)합법투쟁이란 법에 위배되는 본격적인 혁명투쟁을 뜻하며(지하당 구축 등), 반(半)합법투쟁이란 기본적으로는 비합법투쟁을 전개하면서 현행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투쟁을 말한다.

둘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배합전술이다. 이는 레닌이 러시아혁명 시 내걸었던 노동투쟁 전술인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라는 전술을 원용한 것으로 먼저 노동자나 일반 민중들의 대중성을

¹⁴ 하중호, 앞의 책 141~156면

확보하기 위해 임금인상, 노동환경 개선 등의 구호를 내세워 경제투쟁을 전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파업, 시위, 폭동, 무장봉기 등을 지향하는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의 배합전술이다. 폭력투쟁이란 테러, 파괴, 무장봉기 등 비합법 정치투쟁을 말하며, 비폭력투쟁이란 폭력 이외의 온갖 방법을 전개하여 벌이는 투쟁인데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배합하여 투쟁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4) 국군와해전취 전술

북한은 우리 국군을 '괴뢰군'으로 호칭하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무력적 기초이며 반동통치의 중추세력이라 규정하고 혁명 성사를 위해선 반혁명무력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군을 와해 전취하는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민족군대, 인민군대로 전환시킨다면 결정적 시기에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군와해전취 전술의 지침을 살펴보면, 첫째, 전취대상을 병사와 중하층 장교로 지목하고 그들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각성시키는 정치사상 사업을 전개하라는 것이며 둘째, 이어 조직화를 강조하는데 남한 혁명가들은 국군안의 혁명조직을 확대하고 지하투쟁, 무장투쟁 등 투쟁형태를 배합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라는 것이며 셋째, 국군들은 상급자의 명령기피, 도주 등 낮은 형태로부터 병변(兵變),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부분적인 연합투쟁에서 전 사단, 전 군단 등 높은 형태의 전면적인 연합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등이다.¹⁵ 결국 북한은 한국 군대를 와해시켜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전환 활용시킨다는 것이다.

¹⁵ 하중호, 앞의 책 165~171면

(5) 선거투쟁 전술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권력 재편기 때마다 다 각종 선거투쟁 전술을 정교히 구사하면서 이른바 대남적화 혁명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온 바 있다. 북한의 선거투쟁 전술을 크게 ①합법투쟁 전술인 민주연합 전술 ②반(半)합법투쟁 전술인 친북 프락션전술 ③비합법투쟁 전술인 선거방해 전술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민주연합 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 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전술이다. 이 전술은 한국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좌익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과 필요하다면 심지어 야당까지도 '범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반 정권연합' (민주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집권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른바 '민주후보'를 당선시켜 집권정부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결국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현 정권을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후했던 비 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둘째, 친북(親北) 프락션전술은 합법과 비합법전술을 배합한 반(半)합법 선거투쟁 전술로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제도정치권에 침투시켜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원래 프락션(fraction)이란 프락치(fraktsiya)라는 러시아어의 영어표현으로 공산당이 일반 대중조직에 비밀리 침투시켜 놓은 조직원(망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전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된 인사들을 제도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침투시켜 후보공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지원하여 당선키 하는 유형 △기존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 북한

에 우호적인(최소한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인사) 인사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지목하여 전폭지원하고 당선케 하는 유형(물론 당선 후에 북한에 협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포섭)이 있다. 이는 친북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공간을 제도권에 구축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한의 선거전술이다.

셋째, 선거방해 전술은 북한이 한국의 정상적인 선거 실시 자체를 방해, 저지하려는 것으로,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직전에 군사분계선 등에서 직접 제한적 무력행사를 하며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유형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권, 관권에 의한 불법선거, 타락선거 등을 왜곡, 제기하여 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하는 유형 △투, 개표부정 등의 시비를 걸어 원만한 투, 개표를 방해하는 유형 △개표완료 후 부정선거를 내세워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불복 분위기를 선동을 하려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자체를 무효화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북한의 전형적인 선거방해 전술이다.



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방안

1.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방안의 관계
2. 북한의 통일노선과 비판

제 3 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방안

1.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방안의 관계

북한당국의 궁극적 목표는 앞서 지적했듯이 ‘전 조선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사회 실현’(전 조선혁명)이다.

북한의 남조선혁명 과정을 도식화시켜 보면 ‘1단계 : 미제축출(미군철수) - 남한정권 타도 - 민족자주정권(인민정권) 수립/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완수, 2단계 : 남북합작(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 - 사회주의국가 건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의 남북합작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가 있다고 구분하고 있는데, 평화적 전도란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비평화적

전도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전 조선혁명 과정 중 남북합작의 평화적 전도의 하나로 연방제통일방안을 설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은 전 조선혁명의 일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국통일은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한다.¹⁶ 북한은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통일문제를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해왔는데, 그 논리는 북한은 전 조선혁명을 위한 민주혁명기지이고 남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미해방 지구로서 혁명투쟁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⁷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혁명과 해방’의 대상일 뿐이며, 통일이란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전 조선혁명의 일환일 뿐인 것이다.

2. 북한의 통일노선과 비판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포함한 통일노선을 ‘김정일 장군의 조국통일론’으로 집약시켜 놓고 있는데, 크게 조국통일관, 조국통일 3대 현장론,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연방연합제 통일방안(3단계 연방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그 구조를 소개하고 비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국통일관

북한의 조국통일관은 조국통일에 대한 김정일의 기본적 관점과

¹⁶ 김영선, 최철용,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사회과학출판사, 1985, 321면

¹⁷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9, 72면

접근자세, 통일의 성격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 북한은 김정일의 통일관으로 민족자주론, 민족대단결론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선 김정일의 애국애족적 통일관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개념은 ①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외세축출) ②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민족대단결)로 집약된다. 북한이 통일 문제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조국통일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을 '미군의 남조선 주둔과 그로 인한 국토분단'에서 외세(미국)를 축출하는 것을 민족자주권 확립이란 용어로 포장하며 이를 해소하는 것을 통일문제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을 민족내부 문제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민족지상의 과제이고 최고의 애국이라고 주장한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습니다. 조국통일 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는 우에 인용된 김정일장군의 두 명제에서 통일을 대하는 그분의 자세를 읽는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제라는 것, 이것이 김정일장군의 통일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다.”(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 평양출판사, 2002 5번)

(2) 조국통일 3대 헌장론

조국통일 3대 헌장론은 김일성이 제시한 북한의 통일방침인 ① 조국통일 3대원칙 ②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고려민주연방공화

국 창립방안을 지칭한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용어는 김정일이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 방문 시 최초로 사용했으며,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일명 8.4노작)라는 논문 속에서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김정일이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① 조국통일 3대원칙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지칭한다. 북한은 이 3원칙이 김일성이 1972년 5월 3일과 11월 3일에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들과 한 담화에서 발표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원칙이 공식화된 것은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따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일명 7.4 공동성명)에서이다. 이 3대 원칙은 1972년 공동성명 발표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조국통일 원칙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북한은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 원칙을 ‘조국통일 3대 헌장’ 중 하나로 정식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일후인 1972년 7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와 그로부터 25년 뒤인 1997년 8월 4일에 발표한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위상을 조국통일의 초석, 통일강령으로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각 원칙을 평가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주 원칙이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을 반응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네들은 자주화가 되어 있는데,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민족 자주권이 없다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의 자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내정간섭 중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평화통일의 원칙이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네들은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으나, 남한은 대규모 북침전쟁 훈련과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며 비평화적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평화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핵무기 철거,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사훈련 중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한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각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남북한 국민이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대단결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나, 북한은 남한 정부가 반북대결정책, 반민족반통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방하며 민족대단결 원칙의 실현을 위해선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 3원칙의 내용을 보면 결국 대남 적화노선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제한적 방어훈련인 군사훈련을 저지하여 군사력의 저하를 노리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남

한 내의 간첩이나 친북 좌익세력의 활동을 고무하여,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한 다음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저의를 보여준 것인 바 유념해야 한다.

②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시 김일성이 밝힌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며,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김일성의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전략이 구현된 것이며,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 정부를 그대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960년 이후 연방제가 총선거를 통해 통일적 중앙정부의 수립으로 나아가는 과도적 형태였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국가 형성으로 통일국가의 수립을 완성하는 형태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①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②연방제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③10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된다.

연방제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 해체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한국정권의 민주정권으로 교체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및 두 개의 조선책동 중지 등을 내세

우고 있다.

구성과 운영원칙을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 △남과 북이 연방국가의 기구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등이다.

「10대 시정방침」으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 △전 지역 전사회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대단결 도모 △경제적 합작·교류실시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남북간의 교통·체신 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복리증진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통일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정부의 제 활동 통일적 조절 △통일국가로서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한마디로 요약 평가하면, 위장된 평화통일방안이며 바로 적화통일을 은닉하기 위한 선전 전술에 불과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비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존중(초월)하는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란 겉으론 그럴 듯 하게 보이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통일론이다.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방제란 미국(자본주의)이나 구 소련(사회주의연방)과 같이 체제를

통일해서 하는 것이지 체제를 달리하면서 연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역사적 선투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이 방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통치기구(당시 안기부 등 대공 수사기관을 지칭) 해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합법화(공산당 합법화를 의미), 남한의 민주정부 수립(용공정권 수립의미)”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무력통일을 용이하게 하지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북한은 연방제통일의 상대를 남한의 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서는 ‘민족자주정권’(또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의 민족자주정권이란 남한정권이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정권이기 때문에 미제를 축출하고 정권을 타도한 후 들어서는 용공정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넷째, 이 방안은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통일 방안이 아니라 남한내부의 혁명(미제 축출과 정권타도 후 용공정권 수립)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과 남한의 정권이 연방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과 남한의 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서는 용공정권이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 방안에서 통일 시까지 과도체제가 아닌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의 연방제」를 주장하나 그 내용은 단일주권의 연방국가와 국가간의 동맹으로 구성되는 두 주권의 국가연합을 동시에 만들자는 모순을 내포, 하나의 통일된 어떤 국가도 될 수 없는 것

이다. 또한 연방(Federation)과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구별이 모호하다.

여섯째, 이 방안은 통일국가인 연방공화국 수립 후 남북교류를 실현하지는 것으로 그 선후가 전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 자유총선거의 절차마저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연방헌법 등 연방형성에 따른 구체적 절차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국호, 국가형태, 대외정책 노선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일곱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하는 원칙 위에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고 전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방 상설회의가 정치·외교·군사권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국사를 관할한다는 것은 사실상 두 개의 지역정부의 독립적 제도와 주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북한은 10대 시정방침을 연방제로 통일된 이후에 실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방안과는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0대 시정방침을 함께 제시한 것은 연방제 방안이 구체적이고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국내 통일논의 과정에 논쟁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1985)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수단으로 활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결국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의 일환으로 내놓은 위장 평화통일 방안인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술적 변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③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김일성이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총리 강성산의 보고형식을 통해 제시한 통일강령으로, 이 강령의 정식명칭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전문과 10개 조항의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②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③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④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⑤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⑥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 ⑦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⑧접촉·왕래·대화를 통해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 ⑨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⑩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북한은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평가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 강령은 한마디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으로 '광범위한 전 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대강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동 강령의 “외세 의존적 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틴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합동군사연습 중지, 핵무기 철거” 등의 전제조건을 보면 북한의 의도가 명백해진다. 바로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미군을 축출하여 군사적 공백상태를 유도하고 적화통일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 동 강령은 통일방안과 관련해 연방제 방식을 고집하는 가운데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등, ‘하나의 조선정책’ 하에서 남한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전선 형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이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별도로 채택, 서신으로 한국의 정부 및 각계각층의 인사·단체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남통일공세를 가속화시킨 바 있다.

(3) 민족대단결 5대방침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1998년 4월 1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김정일이 보냈다는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서한 속에 제시된 통일방침을 지칭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라 불리는 이 서한은 그간 발표된 북한의 통일노선에다가 김정일의 통일관을 추가한 것으로 김정일이 최초로 제시한 통일방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란 ①민족자주원칙 견지 ②애국애족의 기치 하에 단결 ③남북사이의 관계 개선 ④외세지배와 반 통일세력과의 투쟁 ⑤남북, 해외 온 민족의 연대,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자주는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전 민족 대단결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남한사회가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이며, 남한정권은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 친미 파쇼정권인 바, 자주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선 남한 땅에서 미제를 축출하여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끝장내야 한다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결국 자주를 내세워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혁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술책인 것이다.

둘째,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 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섭하고 단합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혁명전술인 ‘통일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해 혁명의 주력군(노, 농, 학 및 진보적 지식인) 이외에 도시 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정치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등 광범위한 민중들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란 미국(외세 즉 제국주의 침략세력으로 규정)와 현 정권(친미 파쇼정권으로 규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전선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다.

셋째,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을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남한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의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복 대결정책을 청산하고 연북 화해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기의 연북 화해정책이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티스피리트 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해체, 통일인사 석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연북 화해정책이란 대남혁명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주한미군,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국가보안법 등을 모두 제거하여 혁명을 용이하게 하자는 술책이다.

넷째, 민족대단결을 위해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및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 통일정책과 민족분열 책동에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분열주의 세력과 민족반역자들이란 바로 미국과 현 정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 축출과 정권타도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다.

다섯째, 민족대단결을 위해 남북, 해외 온 민족이 서로 왕래, 접촉, 대화하면서 연대와 연합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는 소수 당국자들의 독점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전 민족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통일전선 차원의 주장인데, 특이한 점은 한국정부를 소수당국자 운운하며 북한의 여러 대화 상대중 하나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주장은 겉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결국 민족대단결이라는 미명 하에 현 정부를 고립화시키려는 통일전선 전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김일성의 기존 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용어를 새롭게 포

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상투적인 통일전선 전술차원의 대남정치 강령에 불과하다.¹⁸⁾

(4)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술적 변화

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북한의 연방제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하였다.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분열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는 남북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이며,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전례 없이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보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한 ‘제도통일 후대론’과 지역 자치정부가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갖는 ‘지역 자치정부 권한강화론’을 들고 나온 것은 독일의 흡수통일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술적 변화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¹⁸⁾ 유동열, “대남전략관점에 본 민족대단결 5대방침”, 『북한 1998년 6월호』, 북한연구소, 22-30면

¹⁹⁾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9, 76면

② 낮은 단계 연방제(연방연합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김정일의 연방제통일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²⁰

'낮은 단계 연방제안'으로 불리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의 기본 골격은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보고회'에서 공식으로 등장하였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보고회, 2000.10.6)

이 방안은 종래 북한의 연방제와는 달리 연방정부가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도 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다만 연방정부인 민족통일기구에서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직후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이 북측의 연방제안에 남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선전해왔으며, 2001년 10월 9일 북한 노동신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연방연합제라는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 보위장치를 하나 둘씩 해체하여 남한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

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남한 내부의 혁명을 성사시키거나, 북한 지역정부에 의한 남한점령(남한 민주화운동 지원과 사회질서 유지 명분)으로 적화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도표5〉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전제조건	없음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통일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3단계) ※민족사회 건설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국가체제 존립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통일 체제	남북연합 -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장」을 채택, 남북연합 기구 구성·운영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 → 국민투표로 확정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구체적 언급 없음

²⁰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문화사, 2002년, 134면



시정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양상

1.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
2.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3. 북한의 대남전략 기구

제4장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양상

1.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지난 60여 년간 대남 전략노선을 견지한 채, 대남전략의 하위체계인 대남전술 차원에서 강경-온건노선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전술적 변화상을 보여주었다. <도표6>에서 보듯이, 북한은 매 시기 대남전략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강경노선 후에는 온건노선을, 대남 온건노선 후에는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여 다양하게 대남정책을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도표6〉 북한정권의 대남전략 전개과정

구분	주요 노선	시기	강도
1단계	남침준비기	1948.8-1950.6	강경
2단계	남침전쟁기	1950.6-1953.7	초강경
3단계	위장평화 공세기	1953.7-1961.5	온건
4단계	무력도발 구사기	1961.5-1970.8	강경
5단계	남북대화기	1970.8-1973.8	온건
6단계	대남비타협 투쟁기	1973.8-1988.12	강경
7단계	대화 및 통일투쟁 공세기	1989.1-1994.7	온건
8단계	당민분리 전술기	1994.7-2000.6	강경
9단계	대남유화 노선기	2000.6-2008.2	온건
10단계	대남적대 노선기	2008.2- 현재	강경

(1) 남침준비기(1945.8-1950.6)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부터 대남전략을 전개해왔다. 8.15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김일성 집단을 조종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 결성과 인민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지원하였으며, 북한 지도부는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이른바 전 조선 혁명의 길로 매진하게 된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실제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립대회」임)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 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보고연설을 통해,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현 시기에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조국분단으로 전국적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며 먼저 북조선을 조선

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만들어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자는, 이른바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을 제기한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과 무력에 의한 남조선 해방노선에 입각하여 소련의 지원 하에 군사력을 강화하여 남침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남침역량을 비축하는 동시에 남한사회 교란을 유도하기 위한 공세적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남한 내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등 좌익세력을 지원하여 대구 10월 폭동, 2.7투쟁, 여순 주둔군 반란사건, 제주 4.3폭동 등을 일으키며 남한사회 내 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침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소련과 공모하여 소련군을 먼저 철수(1948.12)시키고 이어 미군의 철수(1949.6)로 남침준비를 마무리한다.

특히 북한은 남침직전인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 명의로 ‘평화통일추진제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의한 바 있으며, 6월 10일에는 남한당국에 수감되어 있는 남로당 간부인 김삼룡, 이주하와 조만식 선생을 교환하자고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기도 했다.

(2) 남침전쟁기(1950.6-1953.7)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이 고조된 결정적 시기로 보고 ‘무력해방론’에 입각하여 전면적인 남침전쟁을 전개하였다. 남침전쟁은 남한을 무력 점령하여 이른바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성격 지워진다. 특히 북한은 점령지역에서 이른바 민주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을 단행하고 남침전쟁을 정당화하는 선무공작을 강화하며 각계 주요인사의 포섭 및 납북공작을

병행하였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패퇴를 거듭한 북한은 퇴각 후 남로당 조직 등을 규합하여 ‘유격투쟁(빨치산)’을 전개한다.

이 시기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력적화 혁명노선에 입각하여 공격형 전술을 구사했던 시기이다. 이른바 남조선 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공작을 전후방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수세에 몰리자 후퇴형 전술을 구사하며 휴전협상 전술로 위기를 극복한다.

(3) 위장평화 공세기(1953.7-1961.5)

북한 김일성은 남침전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휴전협정을 맺게 되자, 남침실패의 책임을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부에게 전가시켜 정권위기를 모면하고 전후복구 3개년 계획과 5개년 실전계획을 수행하여 혁명역량 보전을 주력한다. 이 시기에 북한은 재 남침 준비를 위한 군사력 증강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남 위장평화 정치공세를 강화시켰다. 초기엔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취하다가 4.19를 기점으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했던 시기이다.

북한은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 시 당 규약에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명시하고, 재 남침에 대비하여 남한 내의 주체적인 혁명역량 축적을 위한 지하당 건설 및 혁명의 보조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 구축 등 비합법 대남공작에 주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60년 8월 15일 ‘남북연방제’를 제의하는 등 통일문제를 이슈화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며 우리내부에 제3세력(혁신용공세력) 형성에 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외중에도 북한은 어성호 피납사건(1957), 팔공산 공비사건(1959), 서해 무장간첩선 침투사건(1960), 경주호 납북기도사건(1960) 등을 자행했다.

(4) 무력도발 집중 구사기(1961.5-1970.8)

북한은 5.16 군사혁명으로 출현한 박정희 정권이 반공을 국시로 하며 대대적인 경제건설을 전개하여 체제안정에 진력하자, 국내 좌익세력과 연계하여 지하당 구축공작에 진력하며 한편으로는 강화된 군사역량을 시험하기 위한 무장간첩 침투 및 대남 무력도발 등 폭력전술 노선을 집중 전개하며 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 1964년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며 대남적화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1966년 10월 김일성의 당 대표자회의 연설 이후 무장소조 침투공작 등을 집중 수행하며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나 대남도발이 자행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간첩 황태성사건(1961), 인민혁명당사건(1962), 공군 F-86D기 격추사건(1964), 동백림 간첩단사건(1967), 1.21 청와대기습사건(1968), 미 프에블로호 납치사건(1968), 통일혁명당사건(1968),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1968), 미국 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1969), KAL기 납북사건(1969) 등이 있다.

(5) 남북대화기(1970.8-1973.8)

북한은 1960년 중반 이후 무력폭력 투쟁노선이 실패로 돌아가자, 남북대화라는 우회전술을 구사하며 위장된 평화공세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 시 이전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보완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대남 전략노선으로 설정하고 역량비축에 재돌입하는 방어형 전술을 구사한다. 이 시기에 북한은 평화통일 8개 방안 발표(1971.4), 남북적십자회담(1971.9), 7.4 공동성명(1972) 등을 통해 대화공세를 통해 남한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이완시키며 북한의 폭력성을 위장하

고 대남 선전선동 공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7.4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남침용 땅굴'을 굴착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으며, 북한은 KAL기 납북미수사건(1971), 소흑산도 간첩선침투사건(1971), 휴전선 침투 무장간첩사건(1973) 등을 자행했다.

(6) 대남비타협 투쟁기(1973.8-1988.12)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한 적화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한계를 느끼고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대남혁명의 새로운 여건 조성을 위해 남한정세에 편승한 반합법, 비합법 영역에서의 통일전선 구축공작에 주력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 주도로 1975년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대남공작 전반에 대한 중앙당 집중검열을 실시하여, 대남 공작기구의 개편과 대대적 인사 조치를 통해 대남공작 역량강화를 기도하였다. 이후부터 김정일이 대남부문을 완전히 장악하며 공세적인 대남공작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79년 10.26사태 이후 남한 내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이웅산 폭파사건 및 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한 테러공작을 자행하는 등 비타협적인 대남투쟁을 전개하며 공격형 전술을 구사했다.

한편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며 연방제통일 공세를 강화한데 이어, 1985년 7월 27일에 대남 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출범시키며 이른바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의 극대화를 기도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유럽거점 간첩단사건(1973), 여간첩 채수정사건(1974), 박대통령 저격사건(1974),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미 군헬기 격추사건(1977), 남민전사건(1979), 미정찰기 SR71 격추사

건(1981), 다대포해안 간첩침투사건(1983), 아웅산 폭파사건(1983), KAL858기 폭파사건(1987) 등을 자행했다.

(7) 대화 및 통일투쟁 공세기(1989.1-1994.2)

북한은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소련체제 붕괴 이후 체제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전 시기의 대남 비타협 투쟁 노선에서 대화공세로 전환하며 체제 생존 및 역량보존에 돌입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하나의 조선' 논리를 내세워 반대해 왔던 UN 동시가입(1991.9.17)을 수용하고,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하여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 (1992.2.19)를 탄생시키며 평화통일 공세를 집중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국면 와중에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1992) 등에서 보듯이 대남간첩 공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통일전선 공작의 결실로 하층 통일전선 차원의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이 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층 통일전선을 전개하여 우리 내부에 상·하층 친북 통일전선을 구축하였다. 국내에 급속히 부식된 친북 좌익세력을 지원하며 대대적인 통일투쟁을 전개했는데, 이른바 범민족대회 등 남북·해외동포를 연계한 친북반한 통일전선 공작에 주력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서경원사건(1989), 제4땅굴 발견(1990), 간첩 김낙중 사건(1992),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1992) 등을 자행했다.

(8) 당국-민간 분리전술기(1994.2-2000.6)

북한은 한국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출범으로 이른바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악화되자, 북한은 한국정부를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민간급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이

른바 당국-민간 분리전술을 구사한 시기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여 친북 통일전선 세력을 구축, 혁명역량을 강화하려는 전술의 일환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일시적인 소강국면을 보였으나, 간첩 김동식사건(1995), 강릉침투 잠수정사건(1996), 부부간첩사건(1997), 민족민주혁명당사건(1999), 서해교전사건(1999) 등에서 보듯이 공세적 투쟁을 자행하였다.

(9) 대남유화정책 구사기(2000.6- 2008.2)

2000년 6월 13-15일간 분단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이의 결과물인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이제까지 대남노선과는 달리 대대적인 대남 유화정책을 연출하였다. 특히 북한은 역대 남한정권을 전략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술적으로만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전략적으로 '타협 및 타도의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유화책을 들면, ①한국대통령 비방중상 중단 ②10.4 정상회담 등 수십 회의 남북 당국자회담 실시 ③분야별 남북교류 확대 ④16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 ⑤개성공단 사업 ⑥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관광 실시 ⑦국제사회에서 남북협력 공조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며, 합법적 영역에서의 공작에 주력하며 합법-비합법 전술을 배합한 대남 적화전략을 여전히 구사하였다. 그 사례를 들면, 제한적인 무력도발(NLL, DMZ 월경, 영공침범 등), 서해교전사건(2002.6), 미사일 발사(2006.7), 핵실험(2006.10), 일심회 등 간첩사건(2006.11), 연방제통일 등 변함없는 대남선동(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국보법 철폐, 주적론 폐지, 한

총련-범민련 합법화, 반통일 우익세력 척결, 외세공세 배격-민족 공조 실현, 남조선혁명 독려 등) 공세, 상하층 통일전선의 강화, 공격형 배치구도 유지 등 군사력 증강 등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남 유화노선으로 우리 국민들을 도취시켜 대북 경제심, 안보의식을 희석시키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친북 좌파세력을 고무, 선동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북한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저강도 대남공작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시켰다 재개하는 등의 압박 대화전술을 구사하여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는 유화적 대남전략을 전개한 시기였다고 평가된다.

(10) 대남 적대노선기(2008.2- 현재)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에는 상투적인 대남비방을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2008년 4월 1일자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대남 비방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남 비방선동을 강화해오며, 우리정부의 거듭된 대북제안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대남 적대노선을 지속시킨 바 있다.

이는 북한이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전략적으로 '타도 및 타협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전의 한국정권에 대한 평가노선(전략적 타도대상)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 전까지는 대규모의 쌀, 비료 등 대북 경제지원과 10.4 선언에서 합의한 이른바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취하기가 어렵고, 남북관계를 이전처럼 북한측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대남 적대노선을 통해 현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에서, 대남 강경노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2009년 공동사설에서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 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강변하고,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썬통치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며 대남 적대노선을 구사하는 공세적 대남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남측면에서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남한 내 민간단체와 인사들만을 접촉하고(당국-민간 분리전술), 대외적으로는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직접 접촉(예 통미봉남 전술)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9년 들어서 전쟁불사 등 대남 위협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 국제사회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2009.4.5)하고 제2차 핵실험(2009.5.25)을 강행하는 초강경노선을 구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 파견을 전후하여 장기역류중인 개성공단 직원 석방, 추석 이산가족 상봉 재개, 피랍된 연안호 및 선원 인도, 임진강 수해방지 및 적십자 실무회담 호응 등 일시적인 대남 유화책을 구사하며 대남유화와 적대노선을 배합하고 있다.

2.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1) 남북당국자 회담 거부와 재개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우리의 거듭된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대남비난을 지속하며 당국간 회담을 거부해 오다가 2008년 10월 북한의 요청으로 남북군사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까지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등이 진행되었다.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북한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남북 회담이 지지부진한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북한이 대남 적대노선으로 전술적 변화를 보이며, 한국정부 배제정책을 구사한 탓이다.

북한이 대남 적대행태에서 대남 유화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①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협박 공갈전술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②북한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남압박에 한계가 있으며 ③북한으로서는 핵문제와 관련한 2.13 합의, 10.3 합의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대남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④북한이 대남 강경공세 와중에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및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⑤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계속 외면한 채, 안정적이며 대규모 경제지원의 동력인 한국정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⑥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유지와 체제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정부와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이른바 민족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한 대남경협 지속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 경협분야는 당국자 간 공식대화와는 달리 지속되고 있어 이채롭다. 북한이 경협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당국-민간 분리전술의 일환인데 즉 북한은 한국정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남한 내 민간단체와 인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북한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서 당국자를 추방하는 한국당국 배제의 상징적 조치를 취하고 2009년 2월부터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150여 일간 현대아산 직원 유모(44)를 강제역류하고 2009년 5월 15일에는 개성공단 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압박공세를 강화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감지하고, 역으로 대남 강경자세를 취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무력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초부터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공세의 주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남북경협사업 전반을 흔들었으나, 2009년 9월 이후 통행을 재개하는 등 남북경협을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경제편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키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3) 대남 민간급교류와 통일전선의 강화

남북 민간급교류 분야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08년의 경우 남북 인원왕래와 차량왕래가 지난 정부 시절보다 증가했다

는 사실이다. 남북 왕래인원은 2007년도 159,214명에 비해 2008년도는 186,775명에 달한다. 특히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2008.7.11)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수치이다. 남북교역액도 2007년 1,797백만 달러에서 2008년 1,820백만 달러로 증가한 바 있다. 2008년의 경우 민간급 대북지원액도 725억 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8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민간급 교류가 확대된 이유는 북한이 당국-민간 분리전술에 따른 대남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정부는 철저히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한국의 민간단체만을 택해 정치, 경제, 사회적 대남 전략적 편익을 취했던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중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는 바로 통일전선 사업이다. 북한 통일전선의 대표적 단골 메뉴는 '민족'과 '우리민족끼리'로 대표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남북유화무드로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한 바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 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등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親北反美)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인질'로 한국 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국 통일구호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를 채택하고, '우리민족끼리'를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2009년에도 북한은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활용하여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며, 상층-중층-하층을 연결하는 통일전선의 배합공작과 영향공작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4) 대남심리전과 사이버공작 강화

최근 북한은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온라인(사이버공간)-오프라인(현실공간)을 배합하며, 대남투쟁의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조국 통일투쟁 등 대남선동 공세를 강화시켜 왔다.

북한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인터넷(Internet)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사이버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사이버공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3,400여만 명에 달하고(세계 9위, 인구비례로는 세계5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율이 1,500만여 명(세계4위)을 돌파하여 대다수 국민이 이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및 국내 안보 위해세력들은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사이버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1990대중반 무렵부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무력부 소속의 국방과학원, 평양자동화대학 등을 통해 사이버기술, 사이버전을 연

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온 바 있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은 대남 공작기구의 사이버전담부서에 배치되어 사이버정보수집, 해킹, 대남 선전선동, 교란 및 사이버전 대비훈련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공공망, 상용망에 수시로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더나가 해킹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90여개의 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를 활용하여 국내 안보 위해세력과 연계된 대남 정보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친북사이트에 게재된 안보위해 자료들을 국내 안보 위해권이 여기저기 퍼다 옮김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사상오염(적색의식화)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선군노선 등을 찬양하는 북한 원자로나 선전물들이 광범위하게 널려있어, 선량한 시민들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이를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사건은 사이버공간이 간첩교신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5) 대남 군사도발 위협 강화

북한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NLL 침범 및 우리측 함정 공격, 군사분계선 월경, 아군초소 총격 등의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군사위협과 전쟁위협의 강도를 높여 ①대남 측면에서 한반도에 전쟁분위기와 긴장국면을 조성시켜 한국사회의 내부교란을 유도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친북화를 압

박하고 ②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동요를 최소화하여 수령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③대외적으로 6자회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유력한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2009년 초부터 강도 높은 대남 협박공세를 전개하였다. 2009년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혁명 무력은 리명박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 개버릴 것이다>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하며 군사적 위협을 협박하고 있다. 2009년 4월 5일에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결의안을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같은 해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0일에는 서해 NLL을 침범하고 우리측 함정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북한은 이전의 공격형 군사배치구도를 견지하고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NLL 월경, 영공침범, DMZ 경비초소 발포 등 일련의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제한적 군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전면전쟁 발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인 무력시위와 제3차 핵실험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북한의 대남전략 기구

북한은 노동당 직속으로 대남 혁명전략(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남 공작기구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를 보면,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대남사업 담당비서를 두고 그 휘하에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및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두고 있다. 이들 부서는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대남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예요원을 차출하여 특별팀(Task Force)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4년경부터 김정일이 대남공작의 총사령탑이 되어 현재까지 대남공작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이 지휘하던 「작전부」, 「35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관하여 「정찰총국」(작전부+정찰국)으로 재편했다고 하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기존 기구를 소개한다. 설령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존 대남부서의 기본 기능은 유지될 것인 바 현재 북한의 대남부서 기능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의 개략적인 역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7〉 북한의 대남전략 기구



(1) 대외연락부

대외연락부는 대남공작의 주무부서로 주로 공작원(간첩) 밀봉교육, 납파, 남한 내 지하당 구축공작 및 해외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남한혁명의 주력군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에 몰두하며 직접 남한 내 주사파와 같은 좌익세력과 반정부 인사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교란을 획책하고 있다.

(2)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 주관, 남북 교류협력사업 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핵심적인 대남부서이다. 통일전선부에는 대남심리전 및 남한관련 정보 및 자료를 분석, 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구 남조선연구소)을 운영하고 있다. 소속단체로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통일촉진협의회,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아태평화위(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 등이 있다.

◎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결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시 4.19혁명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에 편승하여 대남 적화혁명 노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하며 제 정당 사회단체·각계인사들을 망리하여 급조된 대남 통일전선의 전위기구이다. 이 단체의 기능과 임무는 △남북 대화업무 전담 △국내 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노

선 선전 및 통일전선 형성 △한국내 국론분열 및 친북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예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성명, 백서, 고발장, 공개 질문장 발표, 국내 인사들에 대한 편지공세) 등이다. 특히 남북 당 국자간 회담 시 조평통 간부들이 직접 회담대표로 나서는 등 남북 회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반제민전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 혁명전 위대이다. 반제민전은 통일혁명당(1969.8.25 창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 일명 민민전, 1985년 7월 27일)을 2005년 3월 23일 개칭한 조직이다. 한민전은 남한 내 친북 좌익운동세력인 주사파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하며 지난 20여 년간 대남혁명을 지도해왔으나,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동년 8월 15일부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같은 주파수로 다시 송출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명칭개칭 이후에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전신인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남혁명을 지도해오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반제민전의 성격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남한혁명을 위한 당면 3대 투쟁목표인 반미 자주화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등을 수행하면서 특히 반제투쟁 즉 반미 자주화투쟁에 주력하는 북한의 대남 전위대라 할 수 있다.

◎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전선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체중 하나로 1946년 2월 15일 박헌영, 여운형, 허헌 등 남한 공산주의자(398명)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1946년 7월 22일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등 북한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

직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모체로 1949년 6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72개 정당 사회단체(704명)가 결집되어 결성되었다. 조국전선은 북한 노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당의 전위기구로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한국내 주요사건 발생 시 마다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개최, 성명·담화 기자회견 등으로 모략 선전하거나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 단체의 성격을 '로동계급이 영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무에 대해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반부의 애국역량을 단합시키므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 단체가 노동당의 전위기구로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조국전선은 현재 조선로동당을 포함, 북한의 24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대표로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장단과 상무위원회 및 서기국이 있으며 조직부·선전부·국제부·재정경리부·기요실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다. 조국전선의 참가단체는 조선로동당(45.10.10), 조선사회민주당(45.11.3), 천교도청우당(46.2.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1.5.13), 조선직업총동맹 (45.11.30),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46.1.17), 조선농업근로자동맹(46.1.31), 조선민주여성동맹(45.11.18), 조선문화예술총동맹 (61.3.2), 조선기독교도연맹(46.11.28), 조선기자동맹(46.3.10), 조선민주법률가협회(54.11.30), 조선학생위원회(60.5.20),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74.5.17), 조선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56.5.31), 조선반핵평화위원회(86.12.5), 조선과학기술총연맹(46.4.14),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49.3.24),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46.2.1),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56.7.2), 조

선 반제투사노병위원회(88.12 확인), 조선불교도연맹(45.12.26), 조선천주교인협회(88.6.30), 조선종교인협의회(89.5.30) 등이다.

◎ 아태평화위(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1994년 5월 미국, 일본 및 아태지역 미수교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 확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북한의 대외정책 전담 기구이다. 이 위원회의 존재는 1994년 7월 26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동 단체는 1995년 4월에 개최된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을 주관한 바 있고, 1995년 쌀 지원 문제를 다룬 북경회담에 전금철이 동 단체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한 바 있다.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노동당의 외곽단체이다. 이 협의회는 1956년 7월 2일 평양에서 안재홍, 조소앙, 엄항섭, 오하영, 윤기섭 등 주로 남북인사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키 위해 조직됐다. 이후 이 조직은 남북인사들의 숙청과 사망으로 활동이 유명무실해졌으나 월북한 이우갑(1988.4)이나 정규진(1989.11) 회원 등을 내세워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한국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비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활동이 뜸한 편이다. 동 단체는 월북한 남한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총회, 상무위원회, 서기국 등의 기구가 있다.

◎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오익제(전 천도교 교령, 1997.8.15 월북)

의 월북을 계기로 1997년 9월 24일 설립한 대남 통일전선체이다. 동 단체는 제1차 회의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 조선민족의 단일성과 우수성을 과시하며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발족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단체는 국내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대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단군제 등의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정권에 있는 것처럼 날조하며 나아가 ‘단군민족’ 등을 내세워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 통일전선 형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평가된다. 동 단체는 1998년 이래 매년 단군릉(평양시 강동군 소재)에서 단군제 및 개천절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은 1998년 '8.15 통일축전' 제의에 앞서 1998년 6월 8일 급조한 단체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응하여 북한 내 정치계, 종교계, 사회계 등 각계단체들과 인사들을 결집하여 통일전선 차원에서 ‘민족’을 앞세워 급조한 대남 통일전선체이다. 이 단체는 김정일이 발표한 통일방침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1998.4.8)에서 언급한 ‘온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과 교류하는 국내 민간단체들과 인사들의 대북접촉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은 1990년 8월 15일 북한 및 친북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여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범민족대회 시 민족대회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한데 이어서 해외 측 대표 곽동의(한통련 의장)가 기구명칭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 범민련)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북측대

표 윤기복(조평통 부위원장)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결성 합의된 단체로 1990년 11월 20일 범민련 결성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범민련 해외본부(당시 의장 윤이상)는 1990년 12월 16일 베를린에서 결성되었고(1992년 2월 24일 본부 위치를 일본 동경으로 이전), 북측본부(의장 윤기복)는 1991년 1월 25일 결성되었으며, 남측본부는 1991년 1월 23일 준비위를 결성한 바 있다. 1991년 이후 범민련은 매시기 범민련 의장단회의를 열어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며 북한의 통일노선을 선전해오고 있다. 그 동안 범민련은 매년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인사 석방, 연방제 통일 및 북한 김일성 찬양" 등을 각종 결의문, 선언문을 통해 선동해온 바 있다. 범민련은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및 공동사무국으로 편제되어 있다. 범민련은 규약 1조에서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라고 밝히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순수한 조직인 양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달성을 위해 북한 공산세력과 남한의 반체제세력 및 친북성향의 해외동포를 연합한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전선체인 대남공작의 전위체라 할 수 있다.

◎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범청학련은 1991년 초 범민련의 강화 일환으로 남북 해외청년학생 단일조직 결성이 모색되었고 1992년 8월15일 제3차 범민족대회 시 판문점 및 서울대에서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결성식을 갖고 공식출범하였다. 범청학련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유일한 전 민족적 청년학생 통일운동체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성사를 위해 투쟁하는 남북 및 해외 청년학생을 연합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성

격의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의 청년학생 부문별 조직으로 범민련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선봉대라고 할 수 있다. 범청학련은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및 공동사무국으로 편제되어 있다. 범청학련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통일전선 공작의 구현체인 범민련의 청년학생 부문별 조직으로 범청학련 강령 9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범민련의 선봉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 조국통일연구원

조국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주로 남한관계 자료나 정보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1959년 12월에 당 문화부(대남 정치선전선동기구) 산하 '남조선연구소'로 신설되었으며 1978년 1월경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로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경에 '통일정책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가, '남조선연구소'로 환원되었으며, 다시 '조국통일연구원'으로 개칭하였다. 이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휘하에 종합정세연구실과 종합편집실 등이 있으며, 약 500~6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임무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반 요소별 대남 정책자료 작성 △한국 주요인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가에 대한 정책 분석 △격주간지 '남조선문제연구' 발행 등이다. 이 연구소의 자료는 대남공작 및 대남정책 수립의 주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당 35호실

당 35호실은 일명 조사부로 불리는 부서로 주로 대외대남 정보 수집, 해외간첩 공작 및 국제·대남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다. 이 부서에서는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 및 1978년 영화배우 최은희, 신상옥 납치공작을 자행한 바 있다.

(4) 작전부

작전부는 대남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 안내, 복귀, 대남 테러공작 및 대남 침투루트 개척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공작부서이다. 이 부서에서는 남파공작원과 전투원(간첩 안내원 및 공작선 요원)들에 대한 정규 기본교육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2개의 육상연락소(개성, 사리원) 및 4개의 해상연락소(청진, 원산, 남포, 해주)를 운영하고 있다.

(5) 정찰국

정찰국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으로 무장공비 양성 남파, 요인암살, 파괴·납치 등 게릴라 활동, 대남 군사정보 수집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공작부서이다. 정찰국에는 907군부대, 448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경보교도지도국 여단, 정찰국 직속 정찰대대 등이 있다. 실제 1983년 버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을 자행한 무장공작원과 1996년 강릉에 침투한 잠수함이 바로 정찰국 소속임이 밝혀진 바 있다.

(6)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최고의 정보사찰기관으로 반혁명분자 및 간첩색출, 출입국 관리, 경호지원, 대남 정보수집 등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반탐국 등을 운영하며 대남공작에 간여하고 있다.



5장

북한 대남전략 전망

1.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
2. 향후 대남전략 전망

제 5 장 북한 대남전략 전망

1.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

향후에도 주체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한 대남적화 혁명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상황변화에 따른 전술적 차원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의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전체구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직접적이고 일관적이며 실천적 조치를 동반한 변화여야 한다.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5개항의 실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적화혁명 부분이 삭제 또는 수

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북한정권의 목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즉 1단계(당면 목표)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단계와 2단계(최종목표) : 남북합작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수행과 이를 통한 공산주의사회 실현전략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의 직접적인 수정 없이 진정한 전략적 변화는 요원하다.

둘째, 북한 대남 적화전략의 사상적 토대인 주체혁명 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을 폐기해야 한다. 이들 사상은 현대 문명사회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배척하는 전대미문의 수령 절대주의의 폭력혁명 사상이다. 이를 폐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상투적인 대남 비방중상, 심리전 활동과 통일전선 공작 등을 중지해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 변화가 있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남 적대정책을 계속 전개하고, 악성 비방중상 선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북한의 행태를 볼 때 근본적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남 간첩공작, 공격지향적 군사력 배치, 육해공에서의 무력도발 등 대남 군사위협과 파괴 전복활동 중지를 공식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 북한이 여전히 간첩침투를 수행하고 전쟁불사를 외치며 대남 군사위협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는 설득력이 없다.

다섯째,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을 중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 군사비용 지출감소 부분을 민간부분으로 전환시키면 누적된 경제난은 해소될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119만 명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2차례에 걸친 핵 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 개발에 진력하는 것은 대남 적화혁명 노선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여섯째,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수령유일 독재체제를 민주정권으로 바꾸는 자유민주 개혁을 의미하며, 개방이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통용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바꾸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견재하는 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개혁과 개방에도 흥미를 가지지 않으며 끄덕하지 않는다. 미국의 집권자들이 우리를 개방으로 유도하여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은 파리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허망한 꿈이다. 이런 것을 두고 오뉴월에 개꿈이라고 한다...”(북한 노동신문 2001.3.15 일자 논평: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덕없다. 中)

2. 향후 대남전략 전망

북한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 공동사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노선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개 자료라는 점

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200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조국 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강변하고,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썬통치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대남 적대노선을 천명한 것이라 평가된다.

신년 공동사설과 함께 주목해야 자료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이 매년 발표하는 신년 메세지나 신년 논설이다. 이 자료는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 중 하나인 「통일전선부」가 국내 친북좌파 세력에게 투쟁과제와 지침을 하달하는 지하 지령문이다. 북한은 <위대한 선군정치 받들어 조국통일 운동을 가속화하자>는 반제민전 신년논설에서 북한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여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투쟁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남 적화전략의 기초를 견지할 것이며, 전술적 차원에서 한국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며 대남 적대노선을 구사하는 공세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대남 측면에서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간헐적으로 대남 유화조치를 배합하고, 남한 내 민간단체와 인사들만을 접촉하고(당국-민간 분리전술), 대외적으로는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직접 접촉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참 / 고 / 문 / 헌

1. 국내 문헌

- 김영학, “공산주의전략과 전술”, 『공안연구 제4집』, 공안문제연구소, 1989.
- 김창순, 『김창순북한연구전집 9권: 북한의 전략전술』, 북한연구소, 1999.
- 김재권·유동열, 『북한학』, 경찰대학, 2009.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2-1992』, 1993.
『북한대사전』, 1998.
-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 유동열,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전술분석”, 『공안논총 11집』, 공안문제연구소, 1999.
“한국의 총선과 북한의 대남선거투쟁전술”, 『북한 2000년 4월호』, 북한연구소, 2000.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 2001년 2월호』, 북한연구소, 2002.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평가”, 『군사논단 2002년 겨울호』, 한국군사학회, 2002.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분석”, 『북한학보 제29집』, 북한학회·북한연구소, 2004.

“북한의 통일전선론 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제31집』, 북한학회·북한연구소, 2006.

“남북정상회담과 대남전략”, 제7차 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발표논문, 2007.9.20.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상”, 『자유민주연구 제2권 제2호』, 자유민주연구학회, 2007.

“2008년 북한의 대남전략전망”, 『자유민주연구 제2권 제2호』, 자유민주연구학회, 2008.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향후 전망”, 『북한 2008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8.

“북한정권 60년 평가: 대남편”, 『북한 2008년 9월호』, 북한연구소, 2008.

“2009년 북한의 선택: 대남편”, 『북한 2009년 2월호』, 북한연구소, 2009.

“국가안보위협세력의 사이버투쟁 실상”, 『국방심리전 정책연구서』, 합동참모본부, 2009.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세계평화통일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9.

유동열(공저), 『한국통일문제의 현주소』, 늘봄플러스, 2008.

제성호·유동열, 『한반도통일과 재야단체통일론의 실제』, 자유기업원, 200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9.

『북한이해』, 2009.

2. 북한 문헌

김명철, 『김정일장군의 통일전략』, 평양출판사, 2000.

김양선·최철웅, 『위대한 주체사상총서5 :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리론,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1997.8.4.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1998.4.1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 1965. 4.14.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25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1988.6.24.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1988.9.9.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출판사, 2001.

북한,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평양출판사, 2007.

북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상』, 조국통일사, 1981.

북한,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안영일·정철만, 『조국통일투쟁사』, 사회과학출판사, 1992.

장석, 『김정일장군의 조국통일론연구』, 평양출판사, 2002.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기타 북한 로동신문 및 북한방송문